

<토론문>

청년세대와의 대화로 미래를 선취하는 기성세대의 지혜를 기대한다

한윤정 녹색연합 공동대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상실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란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나 웬만큼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직시하거나 자신의 삶을 여기에 맞추거나 국가적·사회적으로 시급한 의제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발제자 정규호 선생님은 이런 격차에 대한 분석으로 ‘시간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는 내게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서로 다른 복수의 시간들, 즉 지질학적·생물학적·역사적·기술적·정치적 시간과 기후 시간, 디지털 시간 등이 공존하며 충돌”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각자의 속도와 리듬으로 진행되던 다양한 시간들은 이제 상호 간섭하고 교란하면서 한편으로는 절망을,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을 만들어낸다. 정치의 시간과 기후의 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기후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가 하면, 디지털의 시간이 기후의 시간과 맞아떨어질 경우 반생태적인 AI 개발 총력전이 기후문제의 해법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생태·생명의 가치가 사회적 준거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어떤 시간을 상상하고 살아냄으로써 바람직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까? 생태사회적 시간의 감각과 리듬을 만들어내는 일은 가능할까?

정치인 안철수가 인용해서 유명해진 말(윌리엄 깁슨의 SF 『뉴로맨서』에 나오는 구절)이 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작가는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도달하지는 않으며 특정 집단이나 장소에 먼저 나타난 뒤 점차 사회 전체로 확산한다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했다.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라는 명명조차 불가능하다. 미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아직 오지 않은 것)가 아니라 이미 현재 안에 소수성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생명 가치가 준거가 되는 사회, 이를 위해 포용과 공존을 실천하는 사회 역시 소수의 입장으로나마 우리 사회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전면적으로 발현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다시 기술 이론(에버릿 로저스)을 대입해보면, 새로운 기술은 초기 소수의 수용자를 넘어 대중에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캐즘(chasm: 일시적 정체 또는 단절)을 겪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제도적·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문화적 수용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전자와 후자는 순차적이기보다는 병렬적·동시다발적이지만 문화적 수용과 사회적 합의가 유형의 인프라 구축보다는 좀 더 확실한 대안임은 분명하다.

발제자 역시 생활방식과 인식의 전환, 나아가 문명전환을 위해 교육, 종교, 공론장, 희망적 서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또한 실천과 운동의 핵심으로서 칼 보고스의 “예시적 정치(prefigurative politics)”를 소개한다. 이는 “미래를 향한 비전을 지금 여기의 현실에서 실험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과 지역 단위의 공동체 운동, 사회연대경제 활동, 풀뿌리 주민자치 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좀 더 보충하자면 과거의 전통적인 혁명이나 개혁 운동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었던 데 비해, 예시적 정치는 수단이 목적을 결정하므로 그 운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이 운동의 조직 방식과 실천 속에 반드

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위계질서, 착취, 권력집중을 거부하고 풀뿌리 차원의 민주주의, 참여, 평등한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는 수평적 조직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정치 운동에 해당하겠지만 특히 시한부 성격이 강한 기후 운동의 조급함이나 최근 분화과정(<한겨레21>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 주체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경제 개편론과 기후정의 중심의 체제 전환론으로 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을 보면 더욱 중요하다.

기후·생태·생명 운동이 문화적으로 수용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청년운동/청년정치와 적극적으로 만나고 결합해야 할 것 같다. 현재에 소수자로 존재하는 ‘미래’세대는 예시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들을 교육한다기보다는 그들에게 천착해 변화의 실마리를 끌어내야 한다. 현재 기후·생태·생명 운동은 (민주화와 진보정치 운동의 연장 선상에서) 6070 남성들이나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 운동의 연장 선상에서) 4050 여성들이 주축을 이룬다. 여기서 2030 청년은 기성세대 운동의 가치에 공감하는 청년만이 아니다. 부모세대가 고도성장과 부동산 가격상승을 통해 얻은 부를 질시하며 주식투자에 열중하는 청년들, 정치적 의제와 경제·사회적 위상이 불일치(이른바 ‘내로남불’)하는 민주당 대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청년들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들은 과도한 경쟁, 절차적 공정, 개인주의에 익숙한 한편으로 조직보다 개인이 중심이 되는 삶, 수평적 관계, 이념보다 실용을 앞세우는 장점이 있다. 청년세대가 광복 100주년에 바라는 국가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국가인 동시에 지속 가능한 환경 국가이며 누구보다 생명 위기에 놓인 당사자이기도 하다.

광복 100주년(2045년)의 시간성을 생각해본다. 우리 사회의 짧은 호흡을 고려할 때 뜻밖의 시기상조한 호명을 통해 광복 이후 한 세기라는 시점은 현재에 투입한 미래(이미 와 있는 미래)가 되었다. 발제자는 다양한 시간들의 공존과 갈등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시간들 사이에 ‘공동체적 전망의 시간’이라는 하나의 차원이 더해졌다. 이때쯤이면 생태·생명 가치가 준거가 되는 사회를 꿈꾸는 것은 유엔기후협약에 맞춰 2050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서사이다. 조상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외세의 지배와 수탈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의해 망가지는 걸 막아야 한다. 더구나 광복 100주년 국민동행의 최초 발기인들은 이 사명을 후속세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 어떤 유전자를 전달하고 어떻게 보듬어 양육할 것인가? 선입견 없이 청년세대와 접촉해 대화하는 일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만큼이나 생태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